

# 한동훈, 빈손면담·강혜경 폭로에 ‘악화일로’… “민심 따를 것”

친한계,尹-韓 면담에 “갑갑하다”  
尹, 권력관계 위상 보여주려 한 듯

강혜경, 김건희 여사 의혹 폭로  
명태균씨 연관 27명 명단 공개  
한동훈 “국민만 보고 문제 해결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강혜경씨의 폭로까지 겹치면서 한동훈 지도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른바 윤-한 면담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날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 동안 회담을 했다.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만찬은 차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만찬은 이뤄지지 않았다. 면담 직후 열린 대통령실 만찬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여사 대외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의 면담 이후 행보에 대해 “갑갑하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저희들이 이 길이 ‘민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왔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하는데, 면담 상황도 있었

으니 어떤 속도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가야 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의정갈등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선거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라며 “한 대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남은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 없다는 다짐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인식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당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훈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은 내 밑에 있으니까 알아서들 해라’라는 권력관계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가 면담 중 언급했다고 알려진 김건희 특검법 제발의와 관련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악법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엔 (재표결에서) 4명이 이탈했다”며 “그런데 또 정말 분위기가 나빠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해라(찬성) 투표를 해서 후시라도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21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폭로한 것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김 여사가 받게 해줬다는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명 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27명의 명단(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대통령 이하 직함 생략)을 공개했다.

한편, 한 대표는 오전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전망 소식을 알리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에 인천 강화 풍물시장에서 10·16 보궐선거 당선 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의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계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인적쇄신, 내가 해야 하는 일”… 김건희 리스크 시각차 ‘여전’

尹-韓, 80분간 대통령실서 면담  
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없다’ 입장  
與 이탈 가능성 대해 “어쩔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지만, 면담 이후의 여진이 더 큰 모양새다. 국민의힘 측에서 한 대표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상세 답변을 공개했다. 이를 감안할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날(21일)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면담 직후 한 대표 측의 브리핑과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설명 등을 종합해 보면 한 대표는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조사 협조 및 특검법 등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 분위기는 차분하고 원만하게,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나눈 대화를 상세하게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라인’ 청산 요구에는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면 정리를 했던 사람이다”라며 “인적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과 관련해선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이제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면담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표결 시 이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헌정을 유리하는 (위헌)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권 이탈 가능성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야당 입장에 선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아울러 김 여사 의혹 규명에 윤 대통령은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

져와달라”라며 “다만 의혹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모 최은순 씨가 감옥에 갔던 사실을 언급하며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 한 적이 있느냐”라며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라고 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잘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제기한 여러 요구안에 대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

려졌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진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정치 공세에는 ‘공치’로 대응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대표의 말을 듣고 차분한 어조로 답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60%, 한 대표가 40% 정도 비중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여당 대표가 격의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지 않느냐”라며 덧붙였다. 다만 후속 만남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 syj@

## 긴급 NSC 상임위 “러-북 군사협력, 단계적 대응조치 실행”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의지

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단계도 상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호 국가안보실제1차장(사진)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신



원식안보실장 주재로 한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

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가정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까지도(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정부가 실제 전쟁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에 철수를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